

바이든과 기후 정상들은 기후 위기 해결 못 한다

관련 기사 4~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3면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3면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4~6면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7면

노동자 투쟁

건강보험 고객센터 8면 르노삼성 2면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실태 8면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신정환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적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구조조정)’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적극 호응해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정원 1000명 이상 감축과 신규 채용 대폭 축소, 임금 공격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출하려 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시간 연장 효과를 낼 근무제도 개악, 심야 운행(밤 12시~새벽 1시) 폐지 등을 통해 정원 1000명을 감축하고, 지난해보다 신규채용을 약 69퍼센트나 축소할 계획이다(고작 167명 채용).

요컨대, 지금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러나 그동안 부족한 인력에도 코로나19 방역 실시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온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017년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과 5~8호선 통합 때 이미 정원을 1029명이나 줄인 바 있다. 게다가 인력 증원 없는 4조2교대제가 7년째 이어지고 지난 2년 동안은 퇴직자 수보다 인력을 적게 뽑아, 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세대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기업들에 비용 절감을 압박하며 정규직 신규 채용 축소를 강요하는 것은 완전한 이율배반이다.

임금, 복리후생, 성과급, 연차수당 등을 삭감하려는 것도 부당하다. 올해 공공부문 임금 인상률은 0.9퍼센트로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 수준이라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 수년 동안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악화는 지하철 안전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0년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미흡 상태”인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운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야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교통복지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다. 4월 1일 '재정위기 책임전가 반대 집행간부 총력 결의대회'

행과 정비, 선로와 역사 등 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우마저 악화되면, 지하철 안전은 더 위협받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교통복지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수송, 학생 할인, 지하철-버스 환승 지원 등,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대폭 줄면서 적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늘어난 적자는 공공서비스 제공 주

체인 정부와 서울시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 따른 무임 수송 지원은 외면해 온 정부,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6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을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직장폐쇄에 이어 교섭창구단일화까지

노동악법 이용해 파업권 공격하는 르노삼성

김지태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해 지난 5월 3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노동 악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지난 한 달여간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조법의 관련 조항)를 이용해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직장폐쇄와 함께 대표적인 '노동 적폐'의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추미애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손잡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 뒤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사용자들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고 헌법에 보장된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약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교섭창구 강제단일화가 “법의 탈을 쓴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6월 1일부터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르노삼성에는 네 개의 노조가 있다. 무상급 독립노조인 르노삼성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는 그동안 함께 파업을 벌여 왔다. 독립노조는 조합원이 1800명 가량으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해 작은 규모의 제3노조, 제4노조 지도부는 파업 기간 중에 생산에 적극 협력했고 이번에 사측의 쟁의권 공격에도 힘을 실어줬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르면, 교섭대표 노조가 1년 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기업 내 다른 노조의 요구가 있을 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럴 경우 기존 교섭대표 노조의 합법적 쟁의권도 (새로운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될 때까지) 자동 상실하게 된다는 게 노동부의 해석이다.

르노삼성에서는 독립노조가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얻게 된 게 지난해 5월 27일이다. 사측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을 노렸다. 노동부의 해석을 근거로, 제3노조와 제4노조의 협력을 얻어 쟁의권 박탈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독립노조와, 함께 투쟁해 온 금속노조 르노삼성자

동차지회가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르노삼성 사측이 지난 6월 1일자로 직장폐쇄를 철회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중단시키고, 차질 없이 생산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최근 유럽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몇 달 전부터 시행했던 1교대제를 다시 2교대제로 돌리고, 잔업·특근 계획을 대폭 늘렸다.

위선

지금 르노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노동 존중'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던 문제인 정부 하에서도 악법이 버젓이 활용되고 있는 위선을 보여 준다.

르노삼성 사측은 지난 3년간 매년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파업 노동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양보교섭을 강제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 말이다.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에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영업소에 출입해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독립노조 영업지구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의 압박 속에서, 6월 1일 독립



6월 2일 오전 출근길 홍보전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당일 오전 공장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불만과 갑갑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비록 사측의 공세가 만만치 않지만,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섭창구단일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재개해 생산에 타격을 가하고 사측의 양보를 강제해 내는 것이다. 불법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노동운동의 경험을 볼 때 단호하게 투쟁하고 연대를 모은다면 악법을 무력화

하고 사측을 굴복시킬 수 있다.

파업 재개 전이라도, 잔업·특근을 거부하고, 대규모 중식·퇴근 집회를 열고, 노동운동 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를 모아 나가는 등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려는 진지한 노력 속에서만 임금·단체협약을 개선하고 징계를 중단시키기 위한 압력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활동가들이 걱정하는 사측의 노조 탄압 시도(민주노조 탈퇴 계획 등)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한 가지 주제가 현재 주류 경제학계의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현실 때문이기도, 공포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현실을 보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퍼센트로 올랐다.

영국은 보수당이 선호하는 계산치에 따르면 1.5퍼센트가 됐다.

공포를 살펴 보자. 정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할 것이다. 왜일까?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요 설계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1960~1970년대에 이름을 날렸다.

프리드먼은 화폐수량설로 인플레이션을 설명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경제에 풀린 통화량과 관련이 있다. 돈이 많이 풀려 있을수록 물가상승률도 높아진다.

프리드먼은 이 설명을 이용해 1945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압력을 키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추진한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당시 각국 정부들은 세수와 정부 지출을 조절해 고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하려 했다.

프리드먼은 이런 정책이 헛되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은 고용 수준이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경제에 더 많은 돈을 투여하는 것은 물가상승율을 높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공공지출 삭감과 조직노동자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착취율이 올라가고 신흥공업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만든 값싼 상품들이 선진국에 유입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재개될지 모른

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해 은행에 투입하는 이른바 양적완화 조치를 써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했다. 극단적 신자유주의자들인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지만, 현재까지 그들의 예측은 계속 빗나갔다. 이는 화폐수량설이 틀렸기 때문이다. 화폐수량설은 화폐 공급에 초점을 맞추지만, 카를 마르크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 모두가 주장했듯, 중요한 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다.

재난지원금

계좌에 돈을 넣어줄 수는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 둘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양적완화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핵심 이유다. 기업 경영진은 자사주를 매입해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이로 인한 스태그네이션 때문에 각국 정부는 과격한 정책을 취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라는 것이 생겨났다.

각국 정부들은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다. 이들은 이 지출을 감당하려고 국채를 추가 발행했다. 이렇게 발행한 국채는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추가로 찍어내는 것이다. 그 결과 화폐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처럼 오랫동안 케인스와 프리드먼 사이를 오가던 논평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

그들의 경고가 맞을까?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당히 올랐지만, 이는 그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로 인한 단기적 공급 부족의 반영일 수도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른바 “임금·물가 상승의 악순환”이다. 즉,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 임금 인상을 쟁취하면, 자본가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물가를 더 올리는 것이다.

1960~197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현재는 그럴 징조가 아직 없지만, 고용주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는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거나 휴직 상태인데도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 바이든은 걱정하지 않는다. 일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수익은 수십 년 이래 가장 높고, 노동자 임금은 70년 이래 가장 낮다.

“소비자 물가를 올리지 않고도 임금을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

불평등을 완화해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려는 바이든의 어젠다를 반영한 말이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의 뜻이 그와 같지는 않을 듯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5호 / 번역 최병현

코인 투기는 자본주의가 부추긴 거대한 도박판

강동훈

투기 광풍이 불던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5월에만 약 40퍼센트 떨어졌다. 월간 낙폭으로 10년 만에 최대다. 다른 코인들(이른바 ‘알트코인’)도 하락세에 들어섰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지하고, 미국도 코인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때 주식 시장 거래 규모를 앞질렀던 코인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있다. 6월 1일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의 거래 대금은 10조 원이 채 안 됐다. 4월에 하루 평균 22조 원이던 것에서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처럼 코인 투기 광풍과 가격 급락으로, 투자 중독 증상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며 상담·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

터에 따르면 지난 1~3월 비트코인과 주식투자 중독 관련 상담은 13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코인 투기 광풍 속에 사기 사건도 급증했다. 예컨대, 한 코인거래소가 ‘투자액의 3배를 단기에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6만 9000여 명에게서 3조 8500억 원을 모았지만 원금마저 날린 사건, 코인 발행자가 코인을 한 번에 팔아 치우고 수십억 원을 챙겨 잠적한 사건, 코인거래소가 예치금을 ‘먹튀’한 사건, 코인 발행 회사가 직원을 동원해 거래량과 시세를 조작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유명 기업들도 이런 사기 행각에 뛰어들 듯하다. ‘한글과 컴퓨터’로 유명한 한컴그룹이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아로와나 토큰’을 발행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는 코인 시장을 완전히 규제하는 데는 머뭇거리고 있다. 코인 시장과 관련 기술들을 미래 신사업으로 키울 것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은 다시 떠오를 것인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앞으로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전히 코인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탈집중화된 대안적 화폐가 될 것’이라고 보거나, ‘비트코인의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상당 부분은 오해에 기반한 것이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재화(예컨대 금)를 교환수단으로 쓰자는 자연스런 합의 덕분에 화폐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비트코인도 과거의 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별 가치 없는 지폐가 교환수단으로 통용되는 마당에 코인 같은 디지털 정보가 화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일반화된 상품 생산 체제’이고, 이 체제는 ‘일반적 등가물’인 단일한 가치 척도를 필요로 한다. 이 등가물은 수많은 상품 사이의 교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그것

을 무한히 축적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화한다. 전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이 일정한 재화를 축적하는 것에 만족했다면, 자본가들은 무한한 이윤 축적 욕구에 내몰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상품으로서 생산하려 들게 된다.

그리고 이런 안정적 가치 척도의 등장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이다. 예컨대, 금본위제에서도 중앙은행들은 금의 순도·무게 보증뿐 아니라 다양한 통화·환율 안정 기법을 동원해 화폐 가치를 관리했다. 화폐제도의 확립은 애초부터 국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코인 가격의 급등락에 국가의 ‘보증’이나 규제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코인들이 국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증한다.

혹자는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코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당초 코인들의 기반 기술이라는 ‘블록체인’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블록체인은 보안 역량 등은 과장된 면이 크고 이미 금융계에서 상용화된 전자

서명보다 낫다고 하기 어렵다. 탈집중화와 데이터 위변조 방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는 활용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도 많다고 한다. 예컨대, 현재 비트코인 거래 처리 수수료는 건당 2만~3만 원가량 되고, 비트코인의 거래 처리 시간은 짧게 잡아도 30분이나 된다. 이런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순전한 몽상이다.

사실 지금 코인 투기에 뛰어들 사람 대부분도 코인 시장이 도박판이라고 생각하지, 화폐 제도 개혁이나 미래 기술을 위한 ‘건전한 투자’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럴 듯하게 제시된 환상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코인 도박에 뛰어들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돈도 없고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인 도박판에 빨려 들어가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권력자들은 정말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까?

에이미 리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자신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가 이를 돕고 있다고 한다. 지배자들이 정말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한 것인지 에이미 리더가 살펴본다. 리더는 《자본주의와 식품의 정치》(국내 미출간)의 저자다. [] 안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추가한 부분이다.

4월 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40여 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정상회담을 열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린 이 회의는, 11월로 예정된 유엔기후협약 26차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성격의 중요한 회의였다. 또, 이 회의에는 미국이 세계 기후 정치로 재진입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의 기후 변화 부정론과 단절하고 환경 위기 대처를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자신의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의 골자를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바이든은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강력한 조처에 동참해 달라고 다른 지도자들에게 호소했다.

정말이지, 주요 목표치들은 인상적인 듯 보인다. 회담 직전에 백악관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52퍼센트(2005년 배출량 기준)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의 새 목표치가 2050년까지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 흡수량으로 배출량을 완전히 상쇄한다는 뜻)로 만드는 것이니 다른 나라들도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뒤질 세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도 재빨리 응수했다. 영국은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의 주최국으로, 여당인 보수당은 야심 찬 감축 목표를 채택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목표치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상 정상회담 기간에 존슨은 자문기구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의 권고를 공개 수락했다. 기후 변화위원회는 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8퍼센트, 2035년까지 78퍼센트 감축해 2050년에는 '넷제로'에 도달하는 목표치를 제시해 왔다.

야심 찬 목표?

야심 찬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은 분명 필요하다. 지구 기온은 이미 1도 올랐고 지금대로라면 2050년까지 3도 오를 전망이다. 몇몇 과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수준의 온난화로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전례 없는 폭풍·가뭄·홍수 등 기후 관련 재난의 피해를 입고 있다.

2020년이 밤자마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대화재가 났고 인도네시아



4월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의 바이든은 기후 변화 대응을 내세워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자카르타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다. 초대형 사이클론 '암판'이 방글라데시와 인도 웨스트벵갈을 덮쳐, 약 25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이기도 했다. 7월에 북극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후 재앙의 새로운 증거들이 매일같이 나타났다.

기후 위기 심화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창궐하게 된 것은, 농업 기업들이 산업형 농업을 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결과다.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미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일부는 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도가 예측대로 계속 높아지면, 그런 세계에 인류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인류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다.

우리가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2019년 세계적 기후 항의 행동(약 400만 명이 참가한 2019년 9월 시위는 그 일부였다) 덕에 기후 문제가 정치적 의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바이든이 주최한 기후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선언들을, 대중 행동으로 정치인·정부·기업들을 압박한 끝에 마침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처를 쟁취한 결과로 여길 수 있을까?

바이든과 존슨은 야심 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재건"도 약속했다. 바이든의 '미국 일자리 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비롯해 미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존슨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면, 야심 찬 목표치와 계획을 수립한 후 COP26에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매우 불충분한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바이든 등이 제안한 조처들은 매우 불충분하다. 살펴봐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첫째, 야심차다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 자체가 낮은 수준이다. 둘째, 이들이 제시한 목표치 중 어느 하나도 구속력이 없다. 정치인들이 제안한 내용과 실제로 이행될 구체적 조처 사이에 심연이 놓여 있는 것이다. 셋째, 이들의 제안은 시장의 작동 방식에 의존하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의 경제와 결별하지 않는다.

먼저, '넷제로'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을 호도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쉬운 용어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 심기 등의 조치로 '상쇄'되는 만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니 실제 배출량이 늘어나고 기후 변화 대응이 시장 메커니즘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넷제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한 기후 변화 대응인 '탄소 시장'이 부자들의 부를 더 늘릴 것임은 뻔하다.

[바이든 등이 제시한] 겉으로는 대담하고 야심차 보이는 목표치는 실제로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 '멸종 반란'

의 핵심 요구는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 2025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존슨이 약속한 것은 이보다 25년이나 느린 것이다.

파리 협약 실패

이전에 각국 정부들이 합의한 것들을 살펴보다라도 이런 목표들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5년에 열린 제21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6개 나라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조인한 바 있다. COP26에서 체결할 협약은 파리 협약을 기초로 수립될 것이다.

파리 협약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견줘 상승폭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대 상승폭을] 1.5℃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파리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모두 2030년까지의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NDC)를 설정했다.

문제는 2015년에 처음 내놓은 NDC 목표치가 기온 상승폭을 1.5도는커녕 2도 이하로도 맞추기 미흡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제기후에너지정책센터 소장 스테판 칼베젠은 각국 정부들이 약속을 모두 지켜도 기온은 2.7~3.7도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파리 협약은 5년마다 각국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역행 금지" 조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목표치가 제출돼야



물에 잠긴 인도네시아 자바 시 수십 년 안에 많은 도시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사진 출처: 인도네시아 자바 시



사진 출처: Steve Eason/블리커

유엔 기후정상회의는 25차례나 열렸지만 기후 위기 해결은 갈수록 멀어져 왔다. 2019년 청소년들까지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다

했다.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유엔은 이제 각국에 새 NDC를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야 COP26 회의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UN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NDC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1퍼센트밖에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파괴적인 폭염·산불·홍수를 막으려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이든과 존슨은 자신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세계 무대에 보여 주려 한 것이다. 이들은 야심 찬 목표치를 제출해 다른 나라들을 뒤따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사실 바이든이 제시한 미국의 새 목표치는 기존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파리 협약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이 그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7~63퍼센트 감축해야 한다고 국제 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CAT)은 지적한다. 싱크탱크 파워시프트아프리카(PSA) 소장 무함마드 아도우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바이든이 제시한 목표치는] 지구 기존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사상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가장 부유한 나라에 요구되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이처럼 목표 자체가 기존 상승을 억제하는 데 충분치 않다. 게다가 파리 협약과 NDC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모든 목표치를 자발적

으로 이행한다는, 즉 각국 정부들에게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의 파리 협약은 2020년까지는 어느 나라에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COP26을 앞두고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그런 약속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사실 올해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량은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에 막대한 때문에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는 곧바로 반등해 2020년 12월에는 탄소배출량이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2021년 5월 수치를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50퍼센트 높다.

이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와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정책·조치 사이에 있는 거대한 간극이 명백해진다. 새기후연구소(NCI)의 니콜라스 혼 박사에 따르면 “필요한 수준의 정책이 있는 정부는 하나도 없다.”

친환경 보수당?

아니나 다를까, 보리스 존슨은 으레 그렇듯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의 최근 실적을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이를 알 수 있다.

보수당 정부는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주(州)에서 탄광을 신설하는 계획에 청신호를 켜 줬다. 반발이 컸는데도 말이다. 이 조처는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 컴브리아 광산은 영국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심층 탄광으로, 대부분 수출용인 제철용 철결탄을 2049년까지 캐낼 것이다.

영국은 캐나다와 더불어 ‘탈석탄동맹’의 주요국인데도 이를 승인했다. 이는 COP26까지 이어지는 존슨의 전략의 핵심이다. 탈석탄동맹 회원국들은 석탄 화력 발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컴브리아주 신규 탄광에서 캐낸 석탄은 대부분 수출될 것이고, 이는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배출량을 늘릴 것이다. 이로써 존슨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게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려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보수당은 북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면허 발급에도 동의했다. 동시에 정부의 유일한 ‘녹색 복원’ 정책으로 단일 시공과 저탄소 난방을 제공하던 ‘그린 홈’ 보조금을 삭감했다. 공항 확장은 지원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삭감했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오스트레일리아 전 총리 마티아스 코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원조 규모를 GDP의 0.7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삭감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은, 기후 파탄의 충격에 대응하려는 여러 나라들의 노력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최근 주장했다.

보수당이 약속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조처들을 거의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바이든의 녹색 혁명?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미국의 전력망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100퍼센트 채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든은 이를 동안 열린 화상 정상 회담을 폐회하는 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 아니라 전기차 등 다른 기술 발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존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기후 특사 존 케리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우주 시대나 산업 혁명에 필적할 만한 변화라고 했다. 케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변화의 순간”이니 “이를 만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계획은 정말로 ‘전환적’일까? 사실 찬사가 쏟아지는 바이든의 기반시설 건설 계획은 기후 비상사태에 요구되는 규모·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에 필요한 만큼 공적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

역사가 애덤 투즈가 최근 지적했듯, 가스·석탄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전환하려면 방대한 양의 전력 설비가 추가돼야 한다. 또 풍력·태양광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도를 가로지르

는 새 전력망이 필요하다. 운송 체계와 주택용·산업용 난방도 전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다.

어디서 투자를 유치할까?

바이든의 일자리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 가지 주요 정책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이다. 첫째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고, 셋째는 아동 복지를 개선하는 가족 계획일 것이다.

미국 일자리 계획은 불평등·실업부터 기반 시설과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2조 달러는 매우 큰 액수로 보이고, 투자의 지적대로라면 전체 지출이 2조 7000억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이 액수는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다.

일자리 계획의 약 절반이 기후 위기 대응에 할당된다. 그러나 신속한 자금 수혈이 이뤄진 최근의 다른 경기부양책들과 달리 이 재정은 8년에 걸쳐 쪼끔쪼끔 지급될 것이다. 이 계획은 8년 동안 1조~1조 300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매년 현재 GDP의 0.5퍼센트를 지출하는 셈이다. 이는 탈(脫)탄소에 필요한 투자에 관한 어떤 합리적 추정치에도 한참 못 미친다.

바이든이 제시한 액수를, 버니 샌더스가 제시하고 환경운동 단체 350.org의 창립자 빌 맥키본이 지지한 추정액 16조 3000억 달러와 견줘 보라. 그 린뉴딜 관련 단체들이 지지한 ‘변영법’ 안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영법’은 10조 달러의 재정 투자, 그중 약 80퍼센트를 기후 변화 대응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안이다. 이런 제안들을 보면 당면한 난관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에 대응하는 바이든의 계획이 얼마나 온건한지를 알 수 있다.

바이든의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은 세부 사항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바이든은 전기차 보급을 장려했지만, 2035년까지 판매될 모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제로 모델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지의 문제가 있다. 투즈가 지적했듯, 애초에 그린뉴딜 정책은 일단 기후 위기 해결에 필요한 규모로 지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금을 조달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 방책의 핵심은 기후 대응을 위한 지출 수준이 재원 조달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때는 재원 조달 계획 없이 대규모 지출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투자액을 재원 조달 수준에 연동시키고 있다. 바이든은 증세를 둘러싼 쟁투를 피하려 하는데(고작 트럼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돌려놓는 것일 뿐인데도), 이로써 투자 패키지 전체의 규모가 제한되게 되는 것이다.

투즈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바이든의 기후 정책은 제약에 묶여 절뚝거리



사진 출처 Chris Yakimov(클라크)

바이든의 계획을 훌쩍 뛰어넘는 진정으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초점도 없고 의욕도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바이든의 일자리 계획은 아직 의회 내 협상이라는 난관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린워싱

무엇보다 바이든은 대기업들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대기업들은 바이든의 계획의 일부다. 화상 정상회담 둘째 날 억만장자들, CEO들, 빌 게이츠 같은 기업인들이 회담에 참가해 기후 친화적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자신들의 비전을 세계 정상들에 제시했다.

게이츠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이윤 창출을 계속 이어 나갈지에 있다. 게이츠는 최근 자신의 책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기후 변화가 “엄청난 경제적 기회”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탈(脫)탄소 기업·산업을 건설하는 나라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바이든의 최근 발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 바이든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나라들은 “다가올 청정에너지 호황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게이츠는 자신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 혁신을 고무하는 데에 정부의 경제 개입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초기 투자 리스크를 떠안고 개발한 기술을 민간 부문에 넘겨 이윤 추구 과정에서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공·민간 투자 모두를 보장하겠다는 바이든의 제안·발언과 비슷하다. 브리스틀 웨스트잉글랜드대학교의 경제학자 다니엘 가버 교수는 “정부가 조장한 그린워싱의 대폭 확대”를 경고하며, 훗날 서방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린워싱을 한 민간 금융기관들을 제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규제금융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후 변화의 해법은 그저 시장과 기업들에 맡겨두면 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그리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와의 단절이 필요한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다. 그저 재생에너지, 전기차, 청정 기술에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그저 보태는 수준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근본적 단절

진지하게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자 한다면 화석연료를 캐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오미 클라인이 2015년 파리 협약 체결 당시 지적했듯, 합의문에서 석탄·석유·천연가스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주요 탄소 배출원인 항공·해운도 언급되지 않았다. 파리 협약은 화석연료 산업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황을 내버려 둔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화석연료 산업의 뿌리 깊은 권력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럴 태세가 돼 있지 않다. 우리는 바이든이 대선을 앞두고 프래킹[수압 파쇄로 석유·가스를 시추하는 것] 전면 금지에 반대하고 연방 소유 부지에서만 금지하겠다고 말한 것을 똑똑히 봤다. 프래킹의 90퍼센트는 연방이 소유하지 않은 부지에서 이뤄지므로 이는 완전히 무의미한 선언이었다.

사실 이 점에서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가 수립한 정책을 따르고 있다. 재임 시절 오바마는 ‘셰일가스’의 힘에 주목해, 셰일가스가 시중에 나온 ‘가장 청정한’ 화석연료이자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출할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실 셰일가스가 대량 공급되면 대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와 단절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셰일가스 대량 공급 덕에 미국에는 화석연료 투자가 훨씬 늘었고, 관련 기반시설이 확립됐다. 프래킹 유정, 파이프라인, 발전소 건설과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는 석유화학 산업의 호황도 그 결과였다. 이것들은 지금 수렴되고 있

는 야심 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모두 퇴출돼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COP 합의든, 바이든의 일자리 계획이든 거기에 화석연료를 근절하는 정책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화석연료 소비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2018년 현재 4000억 달러에 이른다고도 추산했다.

또, 정치인들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두고 말잔치를 벌이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60곳은 파리 협약 이후 화석연료 기업들에 3조 80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 최근 한 NG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 총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016년이나 2017년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됐다. 이 보고서가 분석한 은행 60곳 중 미국과 캐나다의 은행이 13곳인데,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세계 화석연료 산업에 조달한 자금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다. 같은 시기,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할 계획을 가장 크게 세운 100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10퍼센트나 늘었다.

화석연료 매립지를 새로 찾는 데에 대한 이 같은 투자와 자금 지원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과 정반대의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히 증명한다. 오히려 이 체제의 핵심인 이윤 창출의 논리가 기후 위기를 낳고 키웠다.

우리는 더 큰 규모에서 변화의 잠재력을 봐야 한다. 2019년 기후 운동은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이라는 구호를 제기했다. 11월에 열릴 COP26 회담을 앞두고 활동가, 기후 운동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다시 한번 함께 시위와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 행동으로 바이든과 존슨이 기후 재앙을 막겠다며 제안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출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웹사이트

번역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바이든 재조사 지시

장호중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코로나19의 중국 기원, 특히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될 이유에서 바이든의 재조사 지시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내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자 바이든의 의학자문을 맡고 있는 앤써니 파우치도 최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이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 세 명이 2019년 11월에 병을 앓았다는 보고서를 공개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미국(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중국 책임을 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 나라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강화되기도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려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초기에 사건을 은폐하느라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중국(시진핑) 정부의 말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야야 우한을 방문할 수 있었던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조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매개한 중간 숙주를 찾지 못했이라며 중국 밖에서 기원한 것일 거라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자들의 다수는 자연 상태에서 박쥐 혹은 중간 매개체를 통해 인간에게 감염됐다고 생각한다. 반면 소수는 실험실 유출설을 지지한다. 실험실 유출설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근거로 삼는 정황은 크게 두 가지다.(두 가지 정황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들도 있다.)

가설들

첫째 가설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수집해 보관하던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2012년 중국 윈난성 쿤밍 지역의 구리 광산에서 광부 6명이 박쥐 배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은 며칠 뒤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고 3명은 사망했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과학자들이 이 광산을 찾아 시료를 채취했는데,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여러 개 발견했다. 이 연구팀에는 스정리라는 연구원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는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보고되자 그 바이러스를 조사했다. 그리고 우한 바이



바이러스 기원이 실험실이든 자연이든,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비롯된 재난임은 분명하다

러스 연구소에 있는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했다.(두 바이러스는 염기서열의 96.2퍼센트가 일치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했다.

나중이야 그 ‘비슷한’ 바이러스가 다름 아닌 2012년 구리 광산에서 발견된 것이었음을 해외 과학자들이 알아냈다.

실험실 유출설이 제기되자 담당자들은 2012년에 채취한 바이러스 자체는 배양에 실패해 염기서열 기록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가설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바이러스의 병독성을 높이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고 그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에코헬스얼라이언스는 환경, 동물, 인간의 건강을 연결하는 ‘원헬스’를 모토로 신종감염병 발생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에코헬스얼라이언스는 다국적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일종의 ‘그린워싱’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규모 팜오일 농장에 의존하는 존슨앤존슨이 그런 기업이었다.

에코헬스얼라이언스는 바이러스의 ‘기능 획득’ 연구를 해 왔다. 기능 획득 연구란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병독성이 나타나거나 인간에게 감염력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연구다.

201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과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코로나19의 친척뻘 되는 사스 바이러스를 변형시키는 연구를 했다. 이 변형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결합하는 부위(ACE2)와 같은 곳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독성을 키운 것이다. 연구원들은 이 연구의 위험성을 인정했고, 미국 정부는 자금 지원을 중단해 해당 연구는 중단

됐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한 명인 스텔리 연구원(앞서 언급된)이 에코헬스얼라이언스를 통해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누락됐으며 이 사실을 논문에 추가하여 게재했다. 미국 정부는 단지 국내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을 뿐, 에코헬스얼라이언스를 통해 우한바이러스연구소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생물학자인 롭 윌러스는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해당 연구를 금지함에 따라 에코헬스얼라이언스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해당 연구를 이어가려 했을 수 있다고 본다. 에코헬스얼라이언스는 2005년 이전부터 중국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해 왔고, 2008년 이후로는 사스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코헬스얼라이언스 대표 피터 다스작은 2017년에도 우한의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4개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썼다. 또, 이 중 일부를 조작해 인체 세포의 특정 부위(ACE2)와 결합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롭 윌러스는 실험실 유출설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일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비난이 오히려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중국 연구소 유출설(실수이든 고의이든)을 무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보건지리학 연구자 토머스 반 보켈 등이 한 연구를 보면, 2001년 9·11 이후 전 세계에 고등급 생물학 연구소가 수천 개나 늘어나면서, 전 세계 인구의 2퍼센트가 연구소의 위험 반경 내에 거주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연구소 유출 사고는 거

의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04년 한 해에만도 베이징 중국국립바이러스연구소에서 네 차례의 바이러스 ‘탈출’ 사고가 일어났다. 2018년 우한바이러스연구소는 연구소 소독약의 효과를 테스트하려고 ‘독성이 악한’ 사스 바이러스를 사용했다.”(롭 윌러스)

2021년 초 중국 우한시를 방문해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한 WHO 조사단은 실험실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 등은 피터 다스작이 해당 조사단의 일원으로 우한연구소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피터 다스작과 우한연구소의 관계를 알던 사람들은 펠쩍 뛰었다. 가장 큰 의혹의 당사자가 조사 책임자를 맡은 셈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팬데믹

롭 윌러스는 감염 경로를 둘러싼 이런 논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더 큰 것을 놓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됐든 박쥐와 야생동물, 인간과 가축 사이의 접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바이러스에게 중간 장벽을 뛰어넘을 변이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개방되면서 윈난성, 광둥성 등 남서부 지역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미국 자본도 그 일부였다), 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며 이런 조건이 갖춰졌다. 산업형 농업 자본은 무책임하게 습지와 산림을 파괴하며 농지를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생계 수단을 잃은 소농들이 야생동물을 거래하도록 중국 정부는 지원했다.

실험실 유출은 이런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될 수많은 가능한 경로의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여러 정황은 미

국과 중국 정부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설사 정말로 인간이 만들어 낸 바이러스가 퍼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미국과 중국, 에코헬스얼라이언스 같은 ‘비영리기구’가 모두 연루돼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팬데믹조차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그 보고서는 최초에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뒤 팬데믹으로 발전하게 되는 “연결고리들은 매우 약한 것”들이어서 각국 정부가 조기에 신속한 조치만 취했어도 지금같은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취약해진 각국의 보건 인프라와 방역 능력이 이런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그 정부들이 70억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 축적을 위한 그들의 다툼과 경쟁은 그 사이에 인류의 미래를 더욱 위협에 몰아넣을 것이다.

추천 책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지음, 장호중 엮음, 244쪽, 12,000원, 책갈피

★ 마른 수건 쥐어짜는 쌍용차 '자구안'